# 국방획득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강상연, 최명진, 심행근, 구남상, 오유수
*건양대학교 방위산업학과
e-mail:sporagame1@gmail.com

#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Sang-Yeon Kang, Myoungjin Choi, Hang-Geun Sim, Namsang-Koo, Yoo-su Oh
Dept. of Defense Industry,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방호기득체계의 문제점을 효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제시하고자 한다.

## 1. 서 론

군의 존재 이유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시 승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직면한 우리 군은현재와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기의 성능이 보다 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한국의 국방획득체계는 70년대 최초로 도입되어 방위사업청 창설 이전까지는 총 17회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국방부가 기획, 계획, 예산체계에 따라 소요, 획득, 운영유지 및 예산의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획득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방위사업청을 탄생시켰고, 개청 이후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간 업무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현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나고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효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 론

### 2.1 국방획득체계의 문제점

방위사업청 창설 이후 지금까지 획득체계를 둘러싸고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의 기능 조정, 예산 및 인력조정 등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득체계를 둘러싼 효율성과 책임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 몇가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요창출을 위한 '사전연구' 기능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소요창출의 사전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존 능력, 미래능력 확보 사이의 격차,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확한 비용산출 및 기술제안서 작성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선진국들과 달리 최적의 능력 도출을 위한 분석하는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경험과 유사 무기체계 자료를 조사해 그것을 토대로 소요군에서 사용할 무기체계 및 장비의 적용규격 및 요구능력을 도출 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 과학적 논리가 부족하다.

둘째, 소요-획득-운영유지의 분리로 인해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관점에서 통합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요창출시 무기체계는 함참에

서, 전력지원체계는 소요군(각 군)에서 실시해 두 체계 간 소요의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전력지원체계는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가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능력을 발휘 할 때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무기체계는 야전에 전력화되었으나 전력지원체계는 뒤늦게 조달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비태세에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국방예산의 이원화로 인해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획득비(방위력개선비)와 운영유지비(경상비)의 부처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 분리되어 있어 획득비와 운영유지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상태에서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장비의 경우 획득예산보다 운영유지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에서는 완성품 무기체계 및 장비에 초점을 둔 획득만을 생각하고, 전력화지원요소 즉, 정비, 시설, 교육훈련 요소 등 무기체계 운영유지에 필요한 군수지원요소는 소홀히 함으로써 무기체계 배치 후 장비 가동률 저하 및 정비소요가 급증되는 현상이 초래하고 있다.

### 2.2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방향

이러한 국방획득체계의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소요기획 단계에서 최적의 전력 '소요창출'을 위한 사전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또 진화적 무기체계 개발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합참 및 각 군의 경우 다양한 대안분석을 통한 최적의 소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참, 혹은 각 군 본부 산하에 '기술지원연구소'를 설립해 소요업무, 특히 운용요구서 작성 및 검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요-획득-운영유지-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총수명주기관리팀(8명)을 구성, 몇몇 시범사업에 한정하여 무기체계 및 장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제 관리한는 TLCSM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 규모로는 효율적인 통제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곳을 컨트롤 타워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국방부가 TLCSM의 컨트롤 타워로서의역할을 수행해 소요-획득-운영유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무기체계 배치 후 장비가동률 저하 및 정비소요 급등 등과 같은 문제문제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상의 취약점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획득비 및 운용유지비를 최적비용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예산이 경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로 이원화 된 상태에서는 국가재정을 고려한 군사력 건설 전반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무기체계 및 장비별 총 비용분석에 따른 예산편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ㅇ로는 경상비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력유지비를 방위력개선비로 전환해 운영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획득과 운영유지 관련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아니면 영국처럼 획득과 운영유지 조직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획득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방획득대학교를 설치해 40년 이상 획득관련 사업관리자를 교육훈련시키고 있다. 우수한 인력을 관리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국방대학교에서 국방무기체계 사업관리(10개 과정)를  방위사업청에서는 분야별 단계화 교육(입문, 실무, 특별) 정도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획득관련 인력이 기본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조원대의 획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을 설치해 우수인력을 획득하여야 한다.

## 3. 결　론

국방획득체계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저하, 비용초과, 일정지연등과 같은 문제들은 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군사력 증강과 유지를 위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적절히 인식, 지금부터라도 국방획득체계 개선관련 위에서 언급한 방안들을 적극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종하 국방획득과 방위산업 이론과 실제